

## 북핵문제의 해결, 무엇이 문제인가?

백 학 순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작년 1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현재까지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전쟁위기를 겪고 있다. 작년 12월 12일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성공, 이에 대한 올 1월 22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087호 채택, 이에 반발하여 1월 23일 북한의 비핵화 포기 선언, 2월 12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성공,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3월 7일 대북 제재 결의 2094호 채택, 그리고 북한의 정전협정의 백지화 선언, 판문점에서 북미 간 군사전화 차단, 북한의 핵 선제타격권 행사 강조, 북한의 남북 불가침합의 무효 선언 및 판문점 남북 간 연락사무소 직통전화 차단, 독수리(Foal Eagle)-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지난 3개월 동안 고조되어온 위기는 4월 30일 독수리훈련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전쟁위협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킬 것인가? 그 동안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 다시 말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법인 ‘압력과 제재’와 ‘대화와 협상’은 각각 어떤 성과를 냈으며,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가? 향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정부는 지금 현재의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근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 심각한 전쟁위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긴장고조와 전쟁위기가 어느 수준인가? 필자는 현재의 위기가 평화의 선택지와 퇴로를 과도하게 차단한, 매우 불안정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몇 가지 요소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예전의 1.21청와대습격사건(김신조 사건), 푸에블로호사건, 판문점도끼만행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등은 모두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지금 현재의 위기는 그것을 뛰어넘어 남북한, 미국의 3국 군대가 한반도 전역에서 전면 대치에 들어가 있는 위기이다.

둘째, 그 동안 한반도 상황의 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온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합의 백지화 및 무효화, 그리고 상호 소통을 위해 유지해온 북미 간, 남북 간 군사전화선이 차단되어 비상시 상황통제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통의 수단이 부재하다.

셋째, 북한이 핵무기 선제타격권 행사를 주장하는 등 도발의 성격이 한도를 넘고 있다. 10여 년 전에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9.19테러 이후 북한 등 7개국에 대해 전술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핵무기 사용위협을 함으로써 북한이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구실을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핵무기 선제사용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핵사용 위협은 소통과 외교가 끊긴 긴장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도를 넘어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미군이 핵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에 투입하여 ‘모의 북 핵폭격’ 훈련을 함으로써 상황이 더욱 더 엄중해지고 있다.

넷째, 북한과 미국, 남한의 지도자들이 모두 일종의 ‘치킨 게임’(game of chicken), 즉 ‘기싸움’을 하고 있다. 관련국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소통을 강화하여 즉시 상황통제에 나서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압력과 처벌의 말과 수단을 도를 넘은 수준으로 강화해가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로, 북한은 이번 위기를 “20년 전을 방불케 하는 첨예한 정세”가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1993년이라면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미국이 영변에 대한 외과수술적 폭격(surgical strike) 직전까지 갔으며, 북한이 ‘준전시 상태’로 들어갔던 제1차 북핵위기 때이다. 20년이 흐른 2013년 3월 11일, 북한은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시작에 맞춰 전당, 전군, 전민에게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고, 신의주에서는 공장, 기업소에도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긴급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 해결 방법 : 종류와 평가

그렇다면,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사용해온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어떤 성과를 냈고, 그것들의 장단점은 각각 무엇인가? 그동안 한국,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압력과 제재’와 ‘대화와 협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그럼, 이 방법들의 성과와 장단점을 각각 살펴보자.

## 압력과 제재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 적용한 ‘압력과 제재’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개별국가 제재였다. 유엔안보리 제재는 결의(resolution)와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이 중심을 이뤘고, 개별국가 제재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취한 다양한 추가적 제재였다. 그동안 유엔안보리가 취한 일련의 대북 결의는 2006년 7월 북한의 장거리마사일 대포동 2호 발사에 대한 처벌로서 1695호,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에 대한 처벌로서 1718호,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처벌로서 1874호, 2013년 12월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대한 처벌로서 2087호, 그리고 올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처벌로서 2094호였다.

북한과 불신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취하는 대북 ‘압력과 제재’는 정치가들에게는 ‘추가적’인 정치적 비용이 들지 않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었다. 일반 국민들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정부가 북한을 처벌하는 ‘압력과 제재’를 하는 경우, 그것의 실제 효과와 여러 관련 문제들을 제기하고 묻기보다는 ‘압력과 제재’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압력과 제재’의 최대의 문제점은 그것이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무기, 인공위성 로켓, 장거리미사일 프로그램 분야에서 자체의 지식, 기술,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압력과 제재’가 ‘직접적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반대로, 효과는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분야의 능력을 더욱 강화토록 구실을 제공했다.

따라서 모든 대북 ‘압력과 제재’는 북한이 감당해야 하는 정치적, 물질적 비용이 너무 과도하여 핵, 로켓,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하는 ‘간접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년간의 경험은 그러한 간접적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압력과 제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금융제재’인데, 북한의 금융체계는 국제금융체계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서 금융제재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력이 제한적이어서 대북 제재의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위에서 설명한 ‘압력과 제재’의 성격, 실제 효과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대화와 협상

한편, ‘대화와 협상’은 ‘압력과 제재’와는 정반대로 그 동안 1994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2000년 제1차 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성명, 2000년 북미공동코뮈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10.4정상선언, 2012년 2.29합의 등 ‘합의’를 만들어 내는 성과를 냈

다. 이러한 합의들은 북한의 핵, 인공위성 로켓,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을 의미했다. 만일 그러한 합의들이 없었더라면, 북한의 핵, 로켓, 장거리 미사일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합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목표로 했던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특히 일부 언론, 정치인들과 보수 여론주도층 인사들이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자체가 잘못된 방법이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호했던 ‘압력과 제재’가 북한의 핵, 로켓, 장거리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켜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북한은 원래부터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느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 재배치해야한다든지, 심지어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등 새로운 주장과 담론을 만들어내면서 더 강력한 수준과 종류의 ‘압력과 제재’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의 방법을 폄훼하고 비판해 왔다.

그렇다면, 왜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가? 기본적으로 북미 간, 남북 간의 불신, 북한의 다양한 취약성으로부터 생겨난 북한지도부의 방어적 심리, 관련국들의 국내정치 특성으로 생겨난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과 이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남한, 일본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가 바뀌는 민주정치체제인데 선거로 인해 바뀐 지도자가 전임 지도자의 대북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180도로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다. 실제 조지 W. 부시정부가 빌 클린턴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명박정부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을, 아베 신조가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대북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정반대의 대북정책을 추구했었다. 이러한 일은 미국, 남한, 일본이 민주정치 국가라는 사실로부터 불가피하게 나오는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국가들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을 상실하고 북한과의 합의를 준수하지 못했으며, 이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 해결을 위한 ‘주고받기’

그렇다면,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 어떻게 6.25전쟁을 종료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며 북한 핵, 로켓, 장거리미사일 문제를 모두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고받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주고받기가 성공하여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문제, 북핵문제 등이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합의와 이행 로드맵이 갖춰야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

## 병의 근원과 증후

올해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라는 ‘병의 근원’은 아직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관련국들이 ‘정전체제’ 하에 놓여있다는 데 있으며, 북한 핵, 로켓, 장거리미사일 문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 등은 그러한 병의 근원이 치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표면으로 드러난 ‘병의 증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의 근원인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면, 병의 증후인 북핵문제, 북한미사일문제, 서해 NLL에서의 군사 충돌 등은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평화공존과 평화체제 vs. 북핵문제 해결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려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미 위에서 “해결 방법: 종류와 평가”에서 지적하였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핵, 로켓,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압력과 제재’와 ‘대화와 협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 보았으나, 이 중에서 유일하게 성과를 낸 것은 ‘대화와 협상’이었다.

그렇다면, 그 동안 북한과 국제사회 간에 이뤄진 ‘대화과 협상’에서 관련당사국들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주고받기를 요구하고 또 약속하였는가? 그동안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에 대한 주고받기 요구로서 두 가지를 내세웠다. 그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우선, 북한이 미국에게 대북 적대시정책을 폐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주권국이라는 것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북한과 평화공존하는 정책을 추구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 요구는 관련당사국들이 6.25전쟁을 종료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적대관계를 끝내고 평화정착과 관계정상화를 이룩하자는 요구였다. 북한의 이러한 요구는 소련 붕괴 후 지난 20여 년간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과거에 미국정부도 상호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주고받기식 타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제 그러한 주고받기 타결(포괄적 일괄타결)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1994년 북미기본합의 정신도 그것이었고, 특히 1996~1999년의 4자회담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여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목적으로 개최된 회담이었다. 물론 2000년 10월 북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도 그러한 주고받기의 정신을 담고 있었다.

한편, 조지 W. 부시정부 들어,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자, 부시정부는 결국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기존의 ‘악의 축’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당시 미 국무부 자문관 필립 제리코의 정책건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즉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국무장관과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는 바로 그러한 주고받기 정신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앞으로도 6.25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고받기를 통한 ‘포괄적 일괄타결’ 외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

## 새로운 합의와 로드맵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은 여태까지 여러 차례 포괄적 일괄타결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합의하였지만, 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행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관련국들 사이의 상호 불신, 관련국들의 국내정치 등 여러 요인들이 관계되어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또 한 번의 ‘대화과 협상’의 기회를 모색하여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낼 때, 이번에는 그 합의가 보다 완전한 합의가 되고 또 그것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이행 로드맵을 만드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상호간에 따로따로 놓지 않고, 양자를 ‘하나의 문제’로 결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합의와 로드맵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문가 수준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평화협정에 북한의 핵 폐기 대상, 방법, 시한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참고로, 6자회담 참여국들은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직접 관련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대한 협상을 할 것”이라는 데 합의했지만, ‘적절한 별도의 포럼’이라는 규정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하나의 문제’로 결합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놓았던 경험이 있다. 결국 미국은 9.19공동성명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만 신경을 썼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직접관련 당사국들(남북, 미국, 중국)의 별도의 포럼은 아예 한 번도 열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양자의 엇박자와 불균형이 9.19공동성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 바람직한 정책은?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의 전쟁위기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근본적으로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정책에 대한 논

의는 다른 곳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박근혜정부에 초점을 맞춰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현재의 위기를 완화시키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북한과 소통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단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나면 상황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위기가 더 이상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기 초기에 남북 간에 무력충돌을 하게 되면, 남은 임기 5년 동안 남북관계가 개선되리라고 보장이 없다. 한미양국이 지금처럼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하고 있는 기간에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무력도발을 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지금과 같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현지 하급부대와 같은 곳에서 군사훈련 중 ‘실수’가 발생하면, 그것이 대규모의 무력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지금은 북미 간, 남북 간에 군사 핫라인이 끊겨 있어 비상시 상호 소통이 막혀있다.

지난 3월 13일 북한은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군 인사들이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 도발 지원,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고, 북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에는 “인류의 의지로 북정권을 지구상에서 소멸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것이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독기어린 치맛바람과 무관치 않다”고 비난했다. 비록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었다. 북한이 이렇게 박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나온 것은 박대통령이 육해공 신임장교 임관식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국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의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식의 강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해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한 비판한 적이 없었다. 이는 박대통령이 향후 5년간 김정은의 파트너가 될 지도자이고, 또 박대통령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유야 어찌됐든 북한이 이제 갓 임기 초기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한편, 박대통령도 특히 지금은 전쟁위기 속에 있으므로 가능

한 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을 피함으로써 북한에게 비판의 구실을 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생각한다면,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은 이것으로써 끝나고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둘째, 박근혜정부는 장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대북 ‘투 트랙’(two track)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유엔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하지만, 위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압력과 제재’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도 오히려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의 위기상황 통제와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대북 강경책과 남북대결 일변도로 나아간다면, 북핵도 막지 못하고 남북관계도 악화되어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협을 안고 살아야 했던 이명박정부의 전철을 반복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대북 투 트랙 접근만이 어찌 보면 마지막 한 번 남아있을지도 모를 ‘포괄적 일괄타결’을 위한 기회인 끈이 될 것이다.

미국정부는 그 동안 공식적인 정책목표로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당위성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특히 이번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비확산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아직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할 때가 아니다. 북핵문제와 정전체제 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제대로 된 협상과 이행이 없었으니, 제대로 협상 한 번 해보고 또 제대로 합의를 이행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 속에서도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 중 ‘시대적 소명’으로서 ‘행복한 한반도’를 내세웠고, 그 내용은 ‘안보, 통일, 외교’ 순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의 순서와는 차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10대 핵심공약 중에서 네 번째를 차지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약이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는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이름하에 최하위로 그 순위가 바뀌긴 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최근의 전쟁위기 속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작동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새로 임명한 류길재 통일부장관에게도 이를 강조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신뢰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안보위기가 최고점에 달해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대북 협력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박대통령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먼저 협력적 조치를 취해 신뢰성을 증명할 것을 일종의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리 측에서 먼저 신뢰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는 재선된 오바마 미 대통령과 톰 도널런 안보보좌관도 북한과 ‘대화과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이 먼저 신뢰성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이번 전쟁위기 고조를 경험한 후 앞으로 한미 공조가 더욱 강화된다고 볼 때, 만일 한미양국이 북한과 대결하고 북한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공조를 강화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와는 달리, 불신과 대결의 구조인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불신과 적대의 구조 속에 있으면서, 더구나 서해에서 남부간에 군사충돌이 발생한다면, 신뢰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진척시켜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여, 북한이 먼저 신뢰조치를 취할 것을 기다리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우리가 먼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신뢰구축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남북관계, ‘한반도 문

## 현안리포트

제’에서 주도권을 잡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남북관계의 회복, 대북 평화 공존 추구, 6.25전쟁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주도권을 쥐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박근혜정부는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제사회를 위해 실로 역사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